

한전공대 등 지역 현안 국비 확보 힘 모으자

민주당-전남도 당정협의회 대통령 공약 조속 이행 촉구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8일 전남도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각 지역 위원장, 전남도 간부 공무원, 도당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지역 핵심 현안과 문

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추진 상황 등이었다.

이는 내년 예산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서둘러 내년도 국비 예산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논리를 강하게 피력했다. 각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군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뛰자고 결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은 ▲한전공대 글로벌 에너지 특화대학 육성 지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국가차원의 지원 ▲에너

지벨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자체 자율기획형 R&D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압해~화원, 화대~백야 국도77호선 개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6조 8000억원의 국비 확보와 한전공대 유치,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은 국회 예결위 위원인 서삼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가능했던 성과”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등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할 대통령 전남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등 도정의 주요 현안이 속속 추진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 및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억 상품권 깡' 회계·감독 아무도 몰라 전남문화관광재단 관리시스템 붕괴

전남도 특별감사 결과

지난해 말 2억여 원을 횡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문화관광재단 비정규직 직원 사건에 대한 전남도 감사 결과, 재단의 법인 신용카드 관리와 회계처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관광재단 특별감사 결과, 승진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로 특정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을 통해 2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의 일탈로 인한 횡령도 문제이지만, 재단이 수역원의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법인카드 관리 소홀, 회계절차 무시, 감독 태만 등 조직관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사용부서별로 신용카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재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단위사업별로 무려 69개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담당자 1명이 69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절차에 따라 결제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사용

내역을 감시해야 하지만, 사업비 통장을 그대로 결제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용카드 관리를 회계·지출담당자가 아닌 사업담당자에게 맡겨 이번 횡령사건의 빌미가 됐다.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도 드러났다. 행사대금 80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업비 통장 집행 잔액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관리 감독 태만을 이유로 재단 A팀장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전남도는 또 신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62건의 부정적 행정행위를 적발해 징계 3명 등 18명을 신분상 조치했고, 6억8000만원을 회수하는 등 19억여원을 재정상 조치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가뭄극복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음양이 지정된 업체와 77건 7억8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업체와 하루 최대 26건 2억4700만원의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 규모가 119건 13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 바둑기사 이세돌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그 일부를 직원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지난 28일 오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재현행사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대구시 손잡고 2·28민주운동 되새기다

이용섭 시장 등 대구 기념식 참석

광주시와 대구시가 지난 2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제59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함께 손을 잡고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장휘국 시교육감, 5·18단체, 4·19단체, 3·15단체 대표,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대구 두류공원의 2·28민주운동 기념탑에 헌화했다.

이 시장은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8개 교고생 등 1200여명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며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이다"고 평가했다. 또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광

주 5·18 정신이 대구 2·28 정신과 맞닿아 달빛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달빛동맹은 앞으로 더욱 굳건해 질 것이며 우리의 강한 연대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 사업이 포함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심의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대 대선 시 영호남 상생협력공약으로 채택됐으며 올해 예산에도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원이 계상됐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와 실무TF를 만들어 국토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이전 사업 추진

오는 14일 DJ센터서 설명회

한국전기연구원(KERI) 광주분원이 조만간 준공되는 등 광주시가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오는 14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13일~1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하늘·바람·땅 에너지전'(광주 SWEET 2019)의 주요 행사 중 하나다. 설명회는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광주 도시첨단산단에 분원 개원을 앞두고 에너지 관련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보유 기술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다.

경남 창원에 분원을 둔 한국전기연구원은 의왕, 안산에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

주분원은 내년 6월 준공 목표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전력변환연구센터와 분산전력시스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에너지관리 기술' '스마트 변전소 끊기지 않는 고신뢰 통신네트워크 기술' '전기자동차 충전 통신기술' 등 6개 기술을 소개한다.

또 13일에는 '광주 SWEET 2019' 행사와 연계해 광주분원 2개 센터와 시험 분야 소개, KERI 보유기술 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전시 부스도 운영해 한국전기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구인력 파견, 기술교육 자문, 연구 장비 활용, 창업지원 등 기술이전 사업화를 상담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올 예산 5조4354억,전남도 8조4238억

지난해보다 6040억, 8534억 늘어 '예산 기준 재정공시' 자료 공개

전남도와 이날 올 예산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날 전남도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도 본정의 2019년 예산 규모는 8조4238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5571억원, 특별회계 8120억원, 기금 1조547억원 등이 다. 이는 국고예산 및 교부세 확보,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일반회계 기준 국고보조금은 3413억원, 지방교부세는 1278억원, 지방세 수입 670억원이 지난해보다 각각 증액됐다. 세입예산 재원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678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조275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 분야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8.97%(1조6131억원)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 14.86%(6150억원), 수송 및 교통 9.98%(4131억원), 교육 7.89%(3265억원), 문화 및 관광 7.78%

(3220억원), 산업·중소기업 4.93%(239억원), 국도 및 지역개발 3.98%(1648억원) 등의 순이다.

전남도는 이날 올 예산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날 전남도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도 본정의 2019년 예산 규모는 8조4238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5571억원, 특별회계 8120억원, 기금 1조547억원 등이 다. 이는 국고예산 및 교부세 확보,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일반회계 기준 국고보조금은 3413억원, 지방교부세는 1278억원, 지방세 수입 670억원이 지난해보다 각각 증액됐다. 세입예산 재원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678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조275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 분야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8.97%(1조6131억원)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 14.86%(6150억원), 수송 및 교통 9.98%(4131억원), 교육 7.89%(3265억원), 문화 및 관광 7.78%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